

보도시점 2024. 4. 29.(월) 12:00 / 배포 2024. 4. 29.(월) 08:30
< 4. 30.(화) 조간 >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 무료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효과 등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고려 -
-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혁신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도 균형있게 심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심사기준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은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도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어 왔으나,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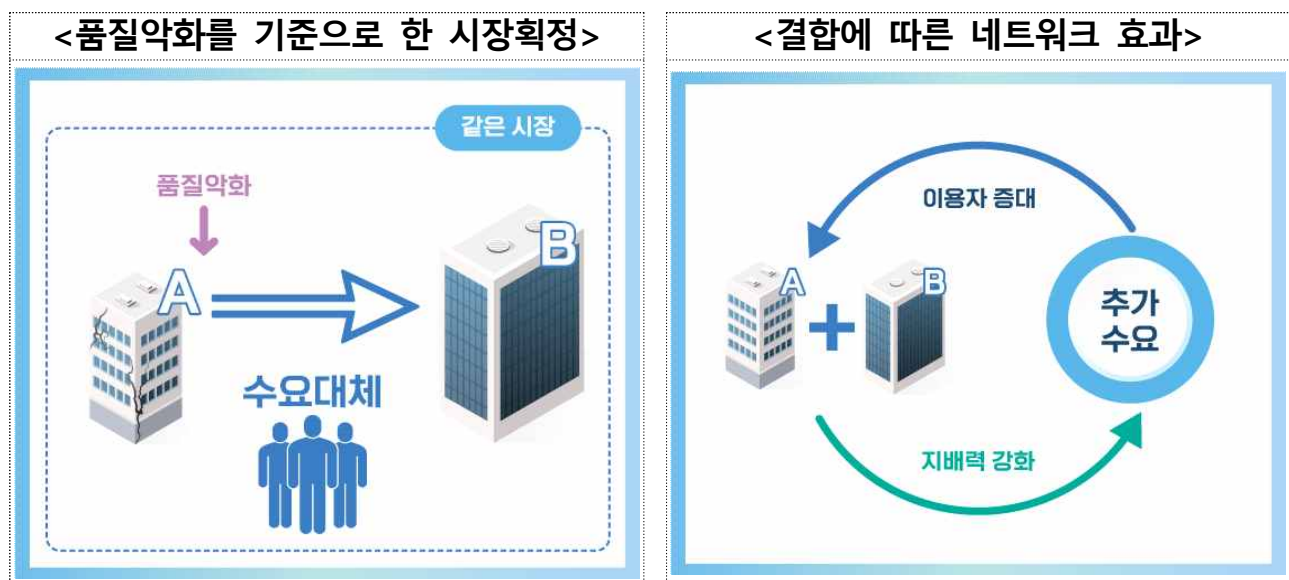
금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위는 그간의 국내외 법집행 경향,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주요 주체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및 스타트업들, 그리고 관계부처,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먼저, 개정 심사기준은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시장획정 방식을 명확히 하였다. 시장획정이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식별함으로써 경쟁의 범위를 특정짓는 과정이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A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가정할 때 B서비스로 수요대체가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A서비스 공급자와 B서비스 공급자가 경쟁사업자로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인상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방법론 적용이 어려워진다. 개정 심사기준은 이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되었다고 가정할 때의 수요대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정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 수 증가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양 증가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역시 추가 수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네트워크 효과)이 클수록 결합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개정 심사기준의 시장획정 기준 및 경쟁제한 평가 기준 일부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내용을 참고하였다.



개정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사례도 보장하여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초기 신생기업(이하 ‘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라 투입자본이 회수(exit)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지는 등의 효과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개정 심사기준은 간이심사 대상을 정비하였다. 현행 심사기준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고된 내용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는 형태로 ‘간이심사’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개정 심사기준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 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는 일반심사 되도록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 이상에 해당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게 인수되는 경우, 그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 다만,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된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위와 같이 일반심사 되려면 피인수 기업이 기업결합 신고요건(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300억 원 이상) 또한 충족해야 한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이하 ‘LP’)이 PE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는, PEF 내부적 행위로서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개정 심사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는 한편,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의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을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가며 혁신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개정 심사기준 주요 내용
2. 행정예고안 대비 달라진 주요 내용
3.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 개요
4. 개정 심사기준 개정안 전문(별첨)
5.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친구조문 대비표(별첨)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병건 (044-200-4932)
	기업집단결합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안석우 (044-200-4934)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 **현행** 심사기준은 ▲**시장획정 기준**, ▲**경쟁제한 우려 평가방식**, ▲**효율성 증대효과 예시**, ▲**간이심사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부분 모두가 개정된다.

1. 시장획정

-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개정 심사기준은, ①**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시장획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시하였으며, ②**다면시장** 획정 기준을 신설하고, ③**혁신시장** 획정 예시를 보강하였다.

- ① 통상 시장획정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대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A서비스 가격 인상시 B서비스로 수요대체가 이루어진다면, A와 B는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

- 그러나,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시청 등으로 대가를 받는 유형(명목상 무료 서비스)의 사업자들의 경우 이러한 방법론 적용이 어려워진다.
- 개정 심사기준은 이러한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 감소 등에 따른 수요대체를 확인하여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A면 이용자와 B면 이용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경우, ▲**A면 이용자의 수가 B면 이용자의 서비스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등에는,

- 면별로 별개의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다면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 소비자/음식점 간 '주문거래'를 중개하는 배달플랫폼의 경우, 소비자 면/음식점 면별로 별개의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배달플랫폼 시장**' 획정 가능
(예) 소비자에게는 SNS 서비스 / 사업자에게는 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경우, '**SNS 서비스 시장**' / '**광고서비스 시장**'을 각각 별개로 획정 가능

③ **혁신활동**(연구개발 등)이 **활발한 사업자 간 결합**의 경우, 이들이 **가격경쟁**이 아닌 **혁신경쟁**을 하고 있음을 고려, **‘혁신시장’**을 **별도로** **확정**할 수 있다.
(현행 심사기준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용)

- 개정 심사기준은 과거 심결례를 반영하여,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경쟁을 하는 사업자들, ▲스마트 기기 OS 개발 경쟁을 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혁신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

2. 경쟁제한성 우려 평가방식 정비

□ 경쟁제한성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개정 심사기준은, ①**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②**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경쟁 제한성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③**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방식**을 현행 실무에 맞추어 정비하였다.

①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가 유발**(네트워크 효과)되고 **결합기업의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더욱 커질 수 있게 된다.
- 개정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우려 평가 시 이러한 측면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역시 높아지므로, **경쟁제한 우려를 평가함에 있어 시장점유율은 중요한 평가지표** 중 하나이다.

- 개정 심사기준은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매출액에 기반한 점유율 산정이 곤란하므로, **서비스 이용자 수나 이용 빈도 등의 대체변수를 활용하여 점유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무료서비스 제공 사업자 간 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가격 인상 우려**보다는,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비가격적인 폐해 우려**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이종(異種) 업종 간 결합인 혼합결합의 경우, 결합 기업이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A상품과 그렇지 않은 B상품을 끼워팔거나 묶어파는* 등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 끼워팔기(tying) : A와 B상품을 별개로는 판매하지 않고, 반드시 한 묶음으로만 파는 것
 묶어팔기(bundling) : A와 B상품을 별개로도 판매하나, 묶음으로 구매할 경우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

- A상품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가 매우 높은 경우, A상품의 지배력이 B상품 시장에 전이되어 B상품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
- 또한, 별개 상품을 함께 공급하는 것이 시장의 관행으로 자리잡는 경우, 한 상품만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 특히, 여러 서비스가 생태계(ecosystem)로 묶여 공급 및 소비되는 경향이 있는 플랫폼 분야의 경우 이러한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
- 개정 심사기준은 이러한 가능성이 기업결합 심사 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3. 효율성 증대효과 예시 보완

- 개정 심사기준은 디지털 경제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혁신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평가되도록 하였다.

<디지털 경제 특성을 고려한 효율성 증대효과 예시>

- ① 기업결합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 증가가 기존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음
- ② 기업결합 결과 추가로 확보하게 된 데이터를 활용,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생산·유통과정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
- ③ 기업결합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소비자가 누리게 되는 편익이 증가할 수 있음
- ④ 혁신적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 기업결합 되는 경우, 기존 투입 자본의 회수(exit)가 신규 스타트업 창업 및 시장진입으로 이어져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나타날 수 있음

4. 간이심사 대상 정비

□ 현행 심사기준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15일 내에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형태로 '간이심사'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 심사기준은 간이심사 대상인 기업결합의 유형을 정비한다.

①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성 또는 대체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부문을 혼합결합하는 경우로서,

- 결합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부문이 직전년도 기준 월 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는 앞으로 일반심사 된다.

-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부문이 많은 이용자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게 인수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만, 기업결합 심사는 통상 신고된 기업결합에 한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위와 같이 일반심사 되려면 인수되는 기업이 기업결합 신고기준 이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현행 신고기준은 기업결합 일방회사의 규모(매출액 또는 자산총액)가 3,000억원 이상, 타방회사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기업결합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

- 결국, 위 기준이 적용되려면 피인수 사업자 또는 사업부문의 고객이 월 평균 500만명 이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 역시 300억원이 넘어야 한다.

②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LP)이 PE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는, PEF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이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였다.

붙임 2

행정예고안 대비 달라진 주요 내용

- 공정위는 행정예고 이후 이해관계자, 전문가,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예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구분	행정예고안	최종 심사기준 내용
시장획정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별도 예시 부재	동영상 사업자가 금전이 아닌, 광고 시청, 개인정보 수집의 형태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를 예시로 추가
경쟁제한 평가기준	비가격적 경쟁제한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	구체적 상황에 적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표현을 수정* * 고려하여야 한다 → 고려할 수 있다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	
	온라인 플랫폼의 혼합결합이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져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음을 규정	진입장벽 공고화 외에, 생태계 간 경쟁촉진 효과를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서술
간이심사 기준	온라인 플랫폼의 보완성, 대체성 없는 혼합결합으로서, 피인수 사업자의 월 평균 이용자 수가 500만명 이상 이거나, 피인수 사업자가 연간 300억원 이상을 연구개발비 로 지출하는 경우 일반심사	① 사업자가 아닌 특정 사업부문만 인수되는 경우, 사업부문 기준으로 이용자를 산정할 수 있도록 명확화 ② 피인수 사업자가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를 '순이용자*' 기준으로 산정(중복 제거)할 수 있도록 명확화 * 이용자 홍길동이 A서비스를 월간 10회 이용 시, 순이용자는 10명이 아닌 1명 ③ 연구개발비 기준 제외
일몰 규정	별도 일몰규정 부재	2년 주기로 현행 심사기준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

1. 기업결합의 의미 및 심사 필요성

- 기업결합이란, 별개로 운영되던 둘 이상의 기업의 구조·인력·자본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
 - 공정거래법 상 기업결합은 5개 유형 → ①주식취득(지분율 20% 이상, 상장회사는 15%), ②임원겸임, ③합병, ④영업양수도, ⑤조인트벤처 설립
 - 기업결합은 필연적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사업자 수 감소를 초래하므로, 시장에서의 경쟁 정도 감소를 야기
 - 그 감소폭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인상, 품질 저하, 경쟁 사업자의 배제 등을 야기할 정도라면 이는 소비자 후생 감소로 귀결
 -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제한, 소비자 후생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 등을 검토하고, 그 우려가 상당한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정조치*를 결합 당사회사에게 부과
- * 구조적 조치 : 주식 매각, 사업부 매각, 회사 분리경영 조치 등
행태적 조치 : 가격인상 금지 명령, 현상유지 명령, 정보교환 금지 명령 등

2. 신고 제도

- 다만, '모든'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측면
 -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시장의 순응비용 측면에서 합리적
- 따라서, 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을 충족하는 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해당 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

□ 신고 기준은 다음의 Two-Track

① (규모기준) 기업결합 일방 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고(and) 타방 회사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

② (거래금액 기준) 결합되는 회사의 규모가 300억원에 못미치더라도, ▲거래금액(주식거래대금 등)이 6,000억 원 이상이고(and), ▲국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기업이 인수되는 경우는 신고대상

* 직전 3년간 MAU가 100만 명 이상인 적이 있거나(or), 직전 3년간 연간 연구개발비가 300억 원이 넘는 적이 있는 기업

3. 심사제도

가. 개요

□ 신고된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다음의 순서대로 심사

① 간이심사 대상여부 판단 → 해당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일반심사

② 시장확정 → ③ 시장집중도(점유율) 산정 → ④ 경쟁제한 가능성 분석 → ⑤ 효율성 증대효과 분석*

* 경쟁제한 가능성을 상쇄할수 있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기업결합은 승인

나. 간이심사

□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간이심사

- ①계열사 간 결합, ②지배관계 미형성* 결합, ③보완성/대체성 없는 혼합결합, ④자본이득만을 얻기 위한 기업결합, ⑤해외 기업 간 결합으로서 국내에 영향이 없는 결합은 간이심사 대상

*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를 자신의 의사대로 지배할 수 없는 경우(예 : 이사회 정족수가 15명인 회사의 임원 1명을 겸임하는 경우 등)

□ 간이심사는 기업결합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만을 판단

- 결합의 경제적 효과는 분석함 없이 사실관계 여부만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 후 15일 내(자료보완기간 미산입) 회신

다. 시장획정

- 간이심사 대상이 아닌 건은 그 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그 시작은 '시장획정'
- 결합 대상 기업의 경쟁상대방을 식별하는 것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대체를 확인하는 것
 - A기업 서비스의 가격 인상 시 또는 품질악화 시(가격이 0인 경우 활용), B기업으로 수요가 대체된다면, A와 B는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
 - 실무적으로 설문조사, 경제분석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분석을 진행

라. 점유율 산정

- 시장이 확정되면, 매출액(사건별로 다른 대리변수 활용 가능)을 기반으로 해당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산정
 - 결합 후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결합회사가 가격 인상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개연성 증대 → 높은 점유율은 경쟁제한 우려의 '간접 증거'

마. 경쟁제한 우려 분석

- 분석된 시장 점유율(간접증거) 및 각종 직접 증거*들을 함께 고려하여 결합 후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지 여부를 분석
 - * 과거사례, 관계자 인터뷰, 내부문건, 시장조사기관 보고서 등
 - 이러한 직접 증거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제출하거나, 공정위가 별도의 검색 및 분석을 통해 확보
- 다양한 경쟁제한 가능성(경쟁제한 이론)들이 다루어질 수 있으며, 심사기준은 결합 유형별로 대표적인 경쟁제한 이론을 열거

<참고 : 결합 유형>

- (수평결합) 직접 경쟁자끼리의 결합(예 :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결합)
- (수직결합) 원재료 공급/수요자끼리의 결합(예 : 삼성전자와 1차 벤더 간 결합)
- (혼합결합) 수평, 수직결합이 아닌 모든 기업결합

- ① (수평결합) 가격 인상, 품질저하, 사업자 간 담합 가능성 증대
- ② (수직결합) 상/하류 시장의 경쟁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공급하지 않거나 경쟁자의 완제품 판매를 방해할 가능성
- ③ (혼합결합) 기타 요인으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진입장벽 증대

바. 효율성 증대효과 분석

- ☐ 사업자가 해당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입증해야 하며 (법 제9조 제2항), 심사기준은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를 규정

4. 절차

- ☐ 신고된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는 30일 내 심사(최대 90일 연장가능 / 최대 심사기간 120일)하여 결과를 통지
 - 단, 신고서 내용이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불산입
- ☐ 심사를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부서는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심사관)이며, 국 차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
 - (경쟁제한 우려 없는 건) 간이심사 대상 또는 일반심사 대상 중 경쟁제한 우려 없는 건은 위원회 심의 없이 종결 및 통지
 - (경쟁제한 우려 있는 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열어, 심사관과 당사회사가 대심구조 하에서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들이 합의로 경쟁제한 우려 심의 및 시정조치(또는 경쟁제한 우려 없음)를 의결
 - 심사관은 경쟁제한 우려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합당사회사에 발송 및 위원회에 상정
 - 당사회사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효율성 증대효과 항변을 서면 및 전원회의(또는 소회의)에서의 구술로 제시